

2022년도 1차 생통포럼

민선 8기,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시 : 2022. 07. 26 [화] 오후 3시

장소 : 5·18민주화운동 기록관(7층)

□ 주최 광주문화도시협의회

□ 주관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쌍채북춤보존회 내드름,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오월어머니집, 광주장애인문화협회, [사]대동문화재단,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극단 연인, [사]윤상원기념사업회, 전통연희놀이연구소

□ 협력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문화예술분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지원포럼

■ 프로그램 [사회 :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구분	토론자
발 표	- 김준영(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지정토론	- 전고필(전라도지오그래픽 연구소장)
패 널	- 윤만식(사.한국민족극협회 상임고문) - 이당금(예술이뻘그라운드 대표) - 정두용(청년문화허브 대표) - 정진삼(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장) - 윤준혁(주.지니엑스 대표) - 김소진(1995Hz 대표)

■ 목 차

1. 발 표	김준영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	07
2. 지정토론	전고필	전라도지오그래픽 연구소장	-----	19
3. 패 널(1)	윤만식	사.한국민족극협회 상임고문	-----	39
4. 패 널(2)	이당금	예술이뻘그라운드 대표	-----	41
5. 패 널(3)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대표	-----	45
6. 패 널(4)	정진삼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장	-----	51
7. 패 널(5)	윤준혁	주.지니엑스 대표	-----	53
8. 패 널(6)	김소진	1995Hz 대표	-----	57

발표문

민선8기,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김 준 영(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1. 민선8기 문화정책 및 방향

민선8기 문화정책은 문화시민의 긍지와 행복, 품격을 높이는데 가치를 두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실현을 목표로 출발한다.

①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중심도시’, ② 생활 속 문화기반을 다지는 ‘문화적 환경도시’, ③ 디지털 기술의 가치를 더하는 ‘문화산업도시’, 그리고, ④ 시민이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끼는 ‘문화 관광도시’ 등을 전략으로 익사이팅한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거듭나고자 한다.

①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중심도시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중심도시’ 분야는 ▲예술인 복지 지원 및 권리 증진 ▲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 ▲청년 문화일자리 창출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365 꿀잼도시 조성 ▲문화예술 교육 및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으로 예술인의 권리 증진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진력할 예정이다.

먼저,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선순환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예술영재 등 전문 문화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하는 등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향유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마을별로 유희 공공·민간시설을 아트벙커로 지정하여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 부터는 생활문화 예술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간 문화교류 확대와 교류 대상의 다변화를 통해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국제문화교류 역량 강화와 위상을 정립하고, 예술과 기술이 융합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지역의 창의역량과 미디어아트 관광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② 생활 속 문화기반을 다지는 문화적 환경도시

‘생활 속 문화기반을 다지는 문화적 환경도시’ 분야는 ▲문화적 도시환경과 문화특화공간 조성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 확대 ▲역사문화유산시설 구축 등으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동명동 일대를 대표문화마을로 조성하면서 상무소각장, 극락강역 폐사일로, ACC 주변 공간 등 지역내 유희공간을 도서관 및 예술인 창작공간 등 문화적으로 재생해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확충해 가고자 한다.

또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신축,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광주문학관 등 시민들의 문화수요를 고려한 문화 향유 공간을 구축해 주변지역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시켜 문화적인 도시환경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특히, 신창동 마한유적 체험관을 개관해 마한문화의 정체성을 알리고 교육·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아시아 독립운동 라키비움과 분청사기 도예창작소 등 광주의 역사문화 유산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③ 디지털 기술의 가치를 더하는 문화산업도시

‘디지털 기술의 가치를 더하는 문화산업도시’는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 구축 ▲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 ▲시장주도형 문화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지원 ▲지역기반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청년층 및 예비인력이 선호하고 기업하기 좋은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취·창업 지원 및 기업 유치까지 문화산업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을 문화콘텐츠산업의 거점기지로 육성하는 한편, 문화콘텐츠 제작부터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프로젝트 제작 지원과 OTT플랫폼 전용 스튜디오 구축 등 지역기반의 문화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고 시장성이 높은 게임산업을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고 이스포츠 경기장과 교육원, 산업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아시아 게임 허브로 입지를 다져갈 예정이다.

아울러, 영화·음악·공예 산업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하려고 한다.

④ 시민이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끼는 문화 관광도시

‘광주시민이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끼는 문화 관광도시’ 분야는 ▲광주만의 관광 콘텐츠 개발·마케팅 ▲모두가 행복한 관광환경 조성 ▲익사이팅 신활력 관광도시 기반 조성 ▲MICE 도시기반 구축 및 관광인력·기업 육성 등이다.

‘대한민국 예술여행 대표도시, 광주’, ‘K-POP 팬들의 명소 조성 등 광주가 가진 경쟁력 있는 지역자원을 관광자원화하고 트렌디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관광기본권’ 법제화 및 ‘시민 로컬투어 아카데미’ 운영,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등 광주시민의 관광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만족도를 높이는 등 모두가 행복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서창향토마을과 월봉서원 등 전통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생활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영산강·황룡강 권역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Y-프로젝트’사업으로 힐링과 치유의 웰니스(Wellness) 중심의 신활력 관광도시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을 조속히 건립하여 국제 MICE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광기업과 인력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관광도시로의 성장을 견인해 가고자 한다.

민선8기에는 예술인의 권리증진,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창·제작 및 향유 기회 확대, 활력이 넘치는 시민이 행복한 관광환경 조성 등을 통해 문화시민으로서 자긍심과 행복지수를 높이고 문화로 미래가 밝은 기회의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2. 조성사업의 변화된 여건에 부응한 광주시의 역할과 과제

2002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시작, 2006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별’) 제정을 거쳐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2004~2023)을 수립하고 2008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착공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이렇듯 조성사업은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문화로 아시아와 함께 세계로」라는 비전으로 광주를 아시아 문화와 자원이 상호 교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여 아시아 각국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는 정책목표를 가진 국책사업이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계획에는 4대 역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국가에서 주도하는 첫 번째 과제인 ‘①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과 문화체육관광부(조성위원회)에서 승인하고 광주에서 주도하는 ②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③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④문화교류도시 역량강화가 나머지 세가지 과제이다.

하지만, 이후 보수정부의 무관심, 의도적인 사업의 의미와 규모 축소 등으로 착공한지 7년만인 2015년에 개관한 문화전당 건립을 제외하고는 다른 세가지 분야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이행 과제로 ‘문화전당과 7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가 강조되면서 새로운 전기가 되었고, 4대 역점 추진과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전보다는 진전된 상황을 맞이했었다.

하지만, 2020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인화를 앞두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유지와 아시아문화원과의 조직 일원화, 조성사업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아시

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중앙정부 및 국회와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고, 조성사업 내실화를 위한 실천과 논의는 다시 후순위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지난해 3월 아특법이 개정되었고, 이후 개관 7년만인 올해 2022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초대 전당장이 선임되었으며, 문화전당이 상설 국가기관으로서 기존 아시아문화원과 통합되어 조직을 개편하면서 정상화 및 활성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창·제작 콘텐츠를 국내외에 유통시키고 이를 활용한 문화상품을 개발·보급하는 등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도 출범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바야흐로 3.0시대다.

아특법 개정으로 조성사업 기간이 5년 연장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해 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3차 수정계획을 수립했다.

3차 수정계획에 따라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민선8기 4년 동안 다양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조성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려 한다. 3차 수정계획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이다.

국가 주도의 아문도시 조성사업은 독특하게 다양한 주체(문체부 아문단, ACC, 광주시, 유관단체 등)가 관여하고 있지만, 사업간 유기적인 추진이나 통합 실행체계가 쉽지 않은 구조다.

불완전한 협업체계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전환해 남은 기간동안 조성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선 효율적인 협치구조가 필요하다.

특히, 아특법 일몰 후에도 조성사업을 지속해서 추진·관리할 수 있는 안정된 체계를 논의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책사업의 실무를 총괄·조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역할이나 책임과 별개로 광주광역시도 중앙정부와 지역 내 협치의 파트너이자 조성

사업의 지역 컨트롤 타워로써 사업의 실질적 주체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조성사업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조성사업의 4대 과제중 핵심사업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정상 운영의 궤도에 오른 만큼 문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광주시 주도의 3대 과제는 마음이 급하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유일한 문화도시 사업임에도 현재 중앙정부의 문화도시에 대한 정책 기조가 지역 주도·국가 지원 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아문도시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한다면, 국가 책임만을 강조하며 지역사회가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조성사업을 둘러싼 국면들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만 의존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역간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개입과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조성사업의 성공은 재정계획에 따라 재원 확보가 주요 관건이기 때문에 지역의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6년 남은 조성사업기간을 고려하면 국비와 지방비의 원활한 투입이 필요하지만, 새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 등 여러 요인으로 재정 확대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아특법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하는 종합계획상 광주시는 조성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주체이다. 국가사업임에도 독특한 구조로 어려움이 많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조성사업의 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우리시는 단계적으로 역할을 다하고 다음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현실성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조성사업 기한내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5대 문화권’별로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예술진흥과 문화·관광·교류도시 역량강화를 위해 3대 과제별로 대규모 사업을 발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연결고리가 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ACC)의 주력사업도 반드시 필요하고, 광주시와 문화전당,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조성사업의 핵심기능을 할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조성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구축한 기반시설과 단위 사업간의 연결성과 향후 확장성까지 고려해 사업의 완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 사업뿐만 아니라 운영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자원과도 연계해 조성사업을 통한 문화에너지가 시민의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8년이후에도 조성사업은 중단없이 진행되고 발전해야 한다.

3차 종합계획에서는 지역 문화자치와 지역분권 시대에 맞게 조성사업을 위해 광주시의 역할이 강화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통합추진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 있지만,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사업으로써 광주시와 대한민국, 아시아까지 확장·포괄하면서 조성사업을 중단없이 지속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운영주체의 필요성에 대하여 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해 갈 것이다.

광주시는 조성사업의 지역 컨트롤 타워로써 남은 기간 동안 조성사업의 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려면, 광주시의 추진 역량과 함께 시민 주도의 참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3. 기 구축된 문화협치 활성화 방안

아특법에서 문화협치는 조성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조성위원회 ↔ 중앙정부 ↔ 광주광역시 ↔ 시민사회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조성사업의 실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위상이 줄곧 축소되어 왔으며, 각 부처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성위원회 또한 국정사업인 조성사업의 부처간 협력 사항을 포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야 하나 그 역할 구현이 실질적으로 미흡한 구조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성사업의 법적·제도적 주체는 국가이지만, 사업이 실행되는 공간이 ‘광주’이기 때문에 조성사업이 문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단위의 총체적인 정치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업 주체들간의 인식과 의미 해석에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그동안 조성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협치가 원활하지 못했고 조성사업 주체들간의 실질적인 협력의 방식과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화협치 조직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그룹이 주체적으로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 포럼’ 운영을 지원해오고 있다. 조성사업의 핵심거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간의 협업강화를 위해 ‘광주시-문화전당 정례협의회’도 두고 있다.

아울러, 연차별실시계획 심의위원회, 투자진흥지구발전위원회 등 조성사업의 분야별 심의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을 비롯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시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관광재단,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광주과학관 등 지역내 문화기관들이 정례적인 형태로 구성한 ‘광주문화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오늘 포럼을 주최하고 있는 ‘광주문화도시협의회’는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주체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2007년 출범했고 조성사업을 포함한 문화정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담론을 형성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처럼 기관은 기관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해왔으며, 2020년에는 아특법 개정을 목표로 연대해 확대된 시민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었다.

시민협의체는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지방정부와 문화전당까지를 포괄해 문화협치의 필요성에 대해 여론을 형성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의 개별적이고 파편적이었던 시민사회의 협력구조를 훨씬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기관과 정치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협의체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아특별 개정을 이끌어 냈으며, 조성사업의 주체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임을 학습했고 경험치를 쌓게 되었다.

이를 재편해 조성사업의 성공과 안착을 열망하는 협치 주체간에 형성된 공감대를 기반으로 조성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여건을 이끌어내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유관기관, 정치권까지 함께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착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가 출범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착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 (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 (官) 市,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관광재단
- (政) 지역 국회의원(대표 이병훈)

아특별 개정 등 여러 요인으로 조성사업의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는 가운데 민선8기가 시작됐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간에 상호 연계하고 통합하는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시민연대는 조성사업에 주체적인 시민 참여와 동기 부여를 위한 매개가 되고, 각 기관은 협력적으로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 자발적인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 광주시와 문화전당은 입체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등 협의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 시스템은 조성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민선8기에도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문화로 미래가 밝은 기회의 도시 광주로 자리매김하는 데 우리시는 뚜벅뚜벅 나아가고자 한다.

지 정 토 론 문

민선8기 광주광역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제언

전 고 필(전라도지오그래픽 연구소장)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향한 여정에 민선8기의 전략이 가지런히 정리된 발제자의 글 잘 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장의 취임과 더불어 행정 시스템의 개편 등으로 여념이 없을 시간에 원대한 그림에서부터 소소하지만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할 사업들까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실장님의 발제를 기반으로 저 또한 거시적인 생각과 미시적인 것들까지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중심도시가 갖는 슬로건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들 그런 도시가 되길 바래왔던 것이기도 하지요. 예술인 복지지원 및 권리증진에 있어서 갖춰야할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중앙의 예술인복지재단에서 1,000억원이 넘는 재원을 예술인 복지분야에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그 수급 대상자로서 지역의 예술인력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보 접근성의 부재라고 해야 될 것이고, 자격 요건의 미달이 그 뒤를 잇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예술인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창작할만한 여건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르별로 다르지만 문학은 최근 5년 이내 5편 이상의 작품 발표 또는 1편이상의 개인 문집, 미술은 최근 5년 이내 5회 이상의 단체전 또는 1회 이상의 개인전, 연극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의 공연 출연, 음악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의 공연 또는 3곡 이상의 연주 등, 이런 작품 발표 실적이라는 전제 조건은 예술인들에게는 버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발표할만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거나 스스로의 사비를 털어야 하는 한계, 작품이 유통되지 않는 최악의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예술가들에게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아울러 정보를 알고 있어도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 어렵게 여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광주문화재단이 예술인 보듬 소통센터라는 직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접근마저도 마땅치 않은 예술인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분야는 진정으로 광주가 문화도시가 되려면 예술인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뀌야 합니다. 복지지원이나 창작지원이 시혜가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하며,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유통과 매출이 증진되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미술에서 아트페어를 하듯이 공연을 비롯한 창·제작에서의 유통과 시연을 지지하는 온-오프라인 공연마켓과 아트마켓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기초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는 예술인 복지는 당연한 것이고, 그들의 삶의 지지하고 응원해주며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공적영역에서의 조금이라도 비빌언덕이 되어주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여깁니다.

소소하지만 예술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동권의 보장과 접근권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도 제언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예술가는 물론이고, 비장애인 예술가까지도. 즉, 광주의 예술인은 대중교통(버스와 지하철)의 이용을 무료로, 공립이건 사립이건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들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금 있는 예술인 단체에 대한 지원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 예술가들에 대해서는 청년과 더불어 최소 보장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이들의 접근 통로를 더욱 개방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예총과 민예총으로 이원화되었던 구조에서 제3지대의 새로운 문화단체들이 신설되는 여건도 조성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행정과 선배들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광주에는 사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끼지 않거나 끼어들고 싶지 않으면서 활발하게 자신의 활동을 펼치는 이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사업을 보면서 거기에 기대서 활동하고 지원 받으려는 몇분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본래의 경로와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다 빈축을 사는 경우를 자주 목도했습니다. 본인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관행일지 몰라도 이런 일들이 광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도시의 정체성이나 광주에 대한 문화부의 평가, 광주의 예술인을 대하는 문화전당의 태도에 결코 선한 영향을 았았다는 점은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는 터입니다.

또한 광주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통한 예술인 지원사업이 연간 30억원 정도인데,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34억원 정도가 출연되는 것은 어떤 연유

였는지? 이러한 이원화된 체제가 광주문화재단의 역할이나 지원시스템의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터입니다. 재단의 심사에서 소외된 예술가와 단체를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시의 재정 운영 방식이라 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문화재단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 인사풀을 전문적이고 공정한 이들을 구축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광주시의 심의위원 풀은 이런 부분에 대해 고뇌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원은 현장을 헤아리며, 이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이들의 열정과 진심을 믿고 그에 대한 결과가 본인과 단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나아가 문화 예술발전에 기여도가 있음을 전제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광주시의 지원 방식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것인지, 악성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인지, 재단의 심사방식에 불만을 가진 이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단체의 지원을 위한 재원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곡된 문화생태계는 사실 이런 또 다른 통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립극단 등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광주시가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먼발치에서 관망하는 자세로 예술인 개개인의 권리는 언제든 보장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관행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요리조리 피해가는 시대가 아니라 사안이 발생하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런 사안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권리증진이라는 단어가 갖는 힘은 일상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연극계의 불공정 계약과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마주한 광주시는 무엇을 했는지 다시 돌아보며, 이제는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위로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며 방지하는 도시가 복지와 권리가 제 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생애 첫 전시나 공연 지원, 경력단절예술인을 위한 지원 등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라야 될 것이며, 그 무엇보다 참여기회의 확대를 위한 광주만의 특별한 지원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강화에서는 그간 광주와 연계된 도시가 얼마나 될까요? 광주시민인 저는 형제와 같은 도시가 어디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광주시는 시 차원에서 교류도시가 있고, 광주문화재단은 재단 차원에서 있을 것이고, 예술단체는 단체 차원에서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 정율성음악제를 통해 깊은 연계를 맺고 있는 광주문화재단도 보수언론의 공격을 받으면 음악교류 사업이 주춤 거리는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슈와 담론의 생성 장으로 봐야 할지, 교류 사업으로 봐야 할지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관련되어 아시아문화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를 달리해 위탁 운영하다가 5년 전부터 광주문화재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슈가 달라지고 관심 사항이 있겠지만, 1회성 이벤트로 끝나 버리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적어도 교류 사업들은 위원회(위원회는 학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아젠다와 현장성에 기반을 둔 이들을 포함)를 두고 그 위원들이 연속성을 가지면서 신진인력들도 양성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담아내고 담론화하며 진행되어야 더 깊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와 관련한 전문성을 가지며, 의제화에 충실할 수 있고, 환대와 교류에 능숙한 인재들, 현장의 실천가들이 부족하지 않은 재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간의 교류 사업에도 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통의 경험을 가진 아시아국가들의 미술이나 공연단체들은 언제고 광주가 호명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사적인 위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소홀히 하거나 관심을 주지 않았다면 이번 8기에서는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하는 실천적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년문화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문화환경과 더불어 ICT분야 등에 많은 주안점을 두시리라 여깁니다. 더불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첨단 기술의 융복합 이전에 원천 자원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병행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날로그와 레트로의 열풍이 한 시기의 트렌드로 소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강상태에 들었다가 다시 솟아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청년들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미래를 만들어가게 하는 것은 문화체육실의 모든 위원회를 비롯해 심사의 과정까지 이들이 30% 이상은 참여할 수 있는 통

로를 열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모든 위탁사업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청년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수주했던 이력이나 공모금액 등으로 진입 장벽을 쌓는 것부터 해체해야 될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보증보험의 방식 등으로 이와 관련한 보호 장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이러한 활동들이 보장되는 분야는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 사업인 대인 예술시장, 예술의 거리, 아트피크닉, 전일빌딩245 활성화 사업, 프린지 페스티벌, 아트페어 같은 분야와 부서간의 칸막이를 넘어 광주시 곳곳에서 이뤄지는 도시재생 사업, 청년 창업지원사업, 예술관광사업 등 에 적용되면 청년들의 참여기회는 더욱 확장되며 스스로 경험의 기회를 가지며 내실 있고 전문성 있는 지역 인재로서 성장 가능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시민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는 아무리 주장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는 각종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과 맥락을 함께 합니다. 프린지 페스티벌을 통해 마을로 찾아가는 프린지 사업이 재단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공연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 활동가나 단체와 함께 논의 테이블을 가지며 마을이 가진 의제와 그간의 경험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가는 일련의 노력과 같은 것들이 지금 광주 곳곳에서 펼쳐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광주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서두르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다른 얘기지만 마을별 유희 공간을 “아트 벙커”로 지정하며 예술활동을 지원하겠다는데, 잠시 드는 생각은 우리는 문화중심도시를 통해 “문화사랑방”이라는 사업을 이전에 논의하고 예비 사업도 펼쳐 본 경험이 있습니다.

굳이 이러한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은 금남로의 물총축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 의견으로 젊은 청년들의 열정이 무너져 갔던 데자뷔 때문입니다. 벙커의 사전적 의미는 은폐 엄폐를 위한 군사시설을 의미합니다. 광주가 추구하는 인권과 평화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상충되는 단어를 가져다 쓰는 것은 여러 이견이 따를 것으로 보여 지는 부분입니다.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신규 거점의 확

보도 중요하지만 그간 활동해왔던 마을 공동체를 비롯하여, 각 구 단위의 문화원, 문화의집, 청소년 문화의집, 문화센터, 문화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이들이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을 위해 기여해왔던 활동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지원시스템을 구조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설하는 것도 유의미하지만 기존 활동을 해 왔던 활동가들과 단체, 시설들이 만들어 냈던 문화의 힘을 드러내주고 고마워 해주며 더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 주는 것도 지금이 적기라고 여겨집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365 꿀잼도시와 관련하여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의도시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진작할만한 컨트럴 타워가 부재했다는 사실, 물론 광주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미디어아트 상설전시와 레지던시, 체험관 운영 등이 이뤄졌지만 그것이 정말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대표할만한 활동이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도시가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막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광명동굴, 광양의 와인동굴, 제주의 빛의 벙커, 노형슈퍼마켓, 강릉 아르떼 뮤지엄, 통영디피랑 등 수 많은 곳들이 명소로서 자리를 잡아온 것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를 보유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세계의 몇 손가락에 드는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도시, 전국 최초로 공영미술관을 가졌던 역사를 가진 도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라는 쾌거를 만들어낸 도시답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는 광주시의 시정이 사람중심이 아니라 아직도 하드웨어를 위시로 한 명분의 획득으로 아젠다를 셋팅하고 아젠다를 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는 다른 일을 또 발굴하는 부지런함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광주국제영화제라고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 먼저 시작한 영화제가 끝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좌초되는 경험에는 몇가지 돌아보아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태도와 습성에 배태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온전히 지역의 자산이자, 사회적 자본으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에 대한 경험과 이끌어내는 방식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에서는 민간의 일이라고 관여를 꺼려하지만 시의 재정이 투입되어야만 운영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마치 어떤 특정 인물이나 단체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것 마냥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지요. 하지만 공공의 이름을 빌어 사업이 수립되고 진행되며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광주시가 어떤 대의와 명분을 온전하게 사업내에 투과 시켜나갈 것인지 고민이 있어야 하고, 그에 부응한 성과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과정이 숙련되지 않은 시의 문화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진일보한 문화정책으로 나가는 시금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비엔날레에서 기획하여, 광주시립미술관을 거쳐 광주문화재단으로 다시 광주시로 이양되어온 광주아트페어 같은 경우가 극명하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미협을 통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재정운영의 부당함이 지역사회의 문제로 떠올랐고, 이 사업은 그로 인해 개별단체에 공모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지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회는 한 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저 쉬쉬하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 일처리 방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런 관행들이 예술의 사회화를 막고, 문화자치를 막고, 문화도시 광주라는 말이 그저 시정 구호로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다시 미디어 아트로 돌아와 말씀 드리면 이 부분을 책임지고 수행할 핵심 거점이 광주에 있어야 합니다. GMAP인지, 시립미술관인지, 광주문화재단인지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에 부응하는 법적 재정적 지원과 육성책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합니다. 몇몇 오피니언이나, 정치인이나 언론에 떠밀려 그 좌표를 상실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각설하고 꿀잼도시라는 단어가 버젓이 여기에 명시된 것이 저는 수치감을 느낍니다.

복합쇼핑몰과 노잼도시는 무엇일까요? 광주가 이토록 정쟁의 도구로 휩싸여 찬반으로 갈리고 세대간의 대결로 간 근본적인 이유를 저는 그간 광주를 통치했던 권력들의 변함없는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한 번도 권력을 내어주지 않는 1당 독임체제,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토착호반세력과 언론, 그곳에 편입되고자 기웃대는 이들의 놀음에 시민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지 조차도 모르고 이런 상황을 사회적 의제화 한번 해 본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5·18 광

주민주화 운동으로 상징되는 역사가 마치 정치 사회와 예술의 선진도시인 것처럼 세상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혁신이나 전환이라는 말은 이런 광주사회에 정말 가당치 않을 정도로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명쾌하게도 광주 제일 권력에 싸움을 걸어온 것이 국민의힘이었고, 이들은 마치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던 2002년 노무현 후보의 공약처럼, 노잼도시 광주를 꿀잼도시로 만들겠다고, 복합쇼핑몰 하나 없는 도시에 그것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프로파간다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광주의 엘리트집단이라고 하는 이들을 제외하고 모두들 이 공약에 귀를 쫓긋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거나 그것에 목말라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주시민들에게 찾아온 것은 일종의 맨탈 붕괴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 다른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었구나. 대체 우리는 이 좁은 곳에서 희망이라든가 즐거움 따위와 상관치 않고 안분지족 혹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아왔구나 라고요.

그럼에도 한 도시의 지향이 꿀잼도시라는 슬로건은 우리가 정치적 레토릭에 스스로의 옹졸함을 내어 주는 것 과 같지 않을까요. 이미 한 당의 선거공약의 프레임 안에서 민선 8기가 좌고우면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심지어 문화경제부시장 제도를 도입하고 임명된 부시장 마저도 복합쇼핑몰 유치가 첫 번째 사업이라는 것을 밝힐 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실장님의 발제문 첫 장을 보면서도 이렇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고, 그럼에도 빠뜨린 이야기도 부지기수입니다.

②의 생활속 문화기반을 다지는 문화적 환경도시부터는 맥락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기반시설의 필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마을마다 하나의 거점이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생활속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해 간다면 시민들의 문화활동의 참여기회의 보장과 체감지수는 더욱 상승할 터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접근방식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활동의 지수가 높은 지역과 전무하다시피 한 지역간의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지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아울러 이 세목에는 해당지역 거주민들의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라이프 사이클은 어떠한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 후에 이입 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문화누리 사업을 통해서도 일정한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취약계층에게 문화가 사치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자긍심을 부여해주는 것이란 점이 드러나는 참여형(참견형)기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발제자께서도 아시겠지만 기존의 문화기반 시설도 노후화되어 개보수를 진행하면서 해당 사업비의 책정이나 운영에 있어서 정작 그곳을 토대로 활동하고 있는 관계자나 이용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례가 몇이나 있습니까?

고영직 문학평론가의 말처럼 지역은 행정이나 기획자의 캔버스가 아닙니다. 삶의 공간이자, 생명의 안식처이고, 밥줄을 이어주는 곳이란 점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첫 번째와 상치 될 수도 있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의 연계점입니다. 7개의 문화권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 5개 문화권으로 변환되었지만, 이와 관련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국비로만 진행하려 하면 문화부에서는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일정한 정도 시의 재원과 노력과 열정이 시민과 함께 전개되고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애로와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지구단위 사업을 연차별 실시계획 안에 넣고도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 광주의 현실이었습니다.

생활속 기반을 다지는 문화적 환경도시는 시민들의 주거 유형별, 종사 사업별 분석과 대안도 필요하지만 도시 미래를 위한 문화중심도시 지구별 사업과의 연계성도 고려한 특화 사업들이 병행되어야 함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족 같지만 광주비엔날레전시관의 신축에 있어서 기증 작품 및 매입 작품의 영구 보존을 위한 수장고의 필요성이나, 비엔날레 전시 준비시의 초대 작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병행되고 있으리라 여깁니다.

아울러 기 개설된 공간(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마련된 유희공간 포함)이나 새롭게 개설될 공간의 운영을 무조건 문화단체나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문화는 바로 경제적 산출효과를 거두지 못하지만 이로 인해 시민이 얻는 이익은 복지부분의 투여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토대로 운영재원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철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③디지털 기술의 가치를 더하는 문화산업도시와 관련하여 말씀 드립니다. 콘텐츠 산업의 기반은 스토리와 기술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도 문화정보원이 있고 아날로그 방식의 로우 데이터를 디지털 라이징을 통해 풍성하고 실시간 공유 가능한 자원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게 당시부터 수장고를 염두에 두지 않아 기존 자원을 아카이빙하고 다시 디지털화 하는데 임계치에 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싶은 말씀은 광주의 역사와 관련하여 삶과 앎과 높을 축적해야 하며, 전당이 못한다면 우리 시라도 나서서 아시아의 농경, 유목, 해양의 생활사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런 자원이 토대가 되어 세계와 겨루거나 공유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부터 구축해야 합니다. 비좁은 옛 시립민속박물관을 역사민속 박물관으로 면피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를 확보하고 번듯한 광주광역시역의 역사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더 우선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④시민이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끼는 문화관광도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Mass Tourism의 시대에서 FIT 혹은 SIT 관광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안입니다. 코로나가 그런 상황을 더욱 가속화 시킨 것도 사실이구요. 대량관광과 개별 관광 두 축 모두 관광산업에서 배제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광주의 관광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갈 곳이 없다고 손님이 와도 모시고 갈 곳이 없다고 체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동네에 사는 시민들이 자기 동네를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명소로 여길 때 지역과 상생하는 관광이 구축된다고 여깁니다.

광주광역시역의 시티투어 역사는 1987년 남해관광으로부터 시작하여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지금 35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몇 가지 시도도 있었지만 늘 그만그만한 숫자의 탑승객을 모시고 외부로부터 조명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방문자들을 위한다지만 시민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외부자들은 더더욱 인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내부의 인터널 마케팅에서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즐겁게 광주를 여행하는 방식을 찾아내야 합니다. 소재 자원 특히 명소 위주의 매력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대체할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4계절의 풍경이 함께하는 코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유연한 코스와 시간대 운영이 필요합니다. 전세버스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재원이 아니라 운영의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전담이 필요합니다. 코스 운영 전문인력, 예약 전문인력, 현장 운영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력과 현장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코스는 곧 외부사회에도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만족도를 높여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인접 지역인 담양, 화순, 장성, 나주 등과의 연계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위탁사업이라고 해도 이를 고도화 시키고 셋팅할 수 있는 관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내부 마케팅에 있어서 또 하나의 취약점은 지역의 여행관련 업체가 대부분 아웃 바운드 중심이란 점입니다. 내 동네를 알고, 알리고, 마케팅하는 전문 여행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꼭 광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의 대부분 지역이 그런 실정입니다. 광주시와 관광재단이 지원을 해서라도 지역에 기반하고 지역을 판매하고 여행상품을 운용할 여행사를 키워내야 합니다. 내국인 전문, 외국인 전문, 두가지를 병행한 전문여행사 등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키워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공적인 마케팅은 광주시와 관광재단과 관광협회가 하더라도, 공격적인 마케팅과 만족도 높은 상품 운영은 그런 여행사가 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광주의 숙박 명소나 카페, 음식점 등 방문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장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케팅의 전방위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협업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양림동의 호랑가시나무게스트하우스나 쌍촌동의 패드로하우스와 같은 곳이 갖는 방문자들의 성지로서의 의미는 각별합니다. 이러한 곳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광재단을 설립했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관광재단이 갖는 한계성 등을 고려한 탄력 있는 정책 운영이 필요합니다. 로컬투어 아카데미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신설한 관광기업지원센터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는 점을 더욱

강조했으면 합니다.

MICE 산업과 관련하여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제2전시장을 건립해온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이와 더불어 Unique -Vanue의 확충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컨벤션 이용자의 니즈가 예전과 같지 않음은 이미 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라벨의 시대에 딱 막힌 회의장만을 고집하던 시대, 케이터링 서비스가 별도로 제공되는 시대가 아니라 숙박까지도 함께 해결하는 회의산업으로, 대규모 이용자들도 있지만 소그룹별 이용자도 증가하는 시대에 부응하여 이와 관련한 대안도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광주시가 유니크메뉴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일정한 정도의 지원을 하는 방식도 채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언급하는 것이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광주시가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독립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시의 수급을 받는 하급 기관 정도로 위상에 둔다면 이들은 단절된 소통통로, 부재한 대표이사, 자원과 시스템의 한계 등으로 언급조차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선8기가 역점 사업으로 내세운 영산강·황룡강 권역의 Y-프로젝트 사업은 그 정확한 내용이 9월부터 시작할 용역에서 나온다고 하니 그간의 보도자료를 통해 말씀 드립니다.

그 물(최근 환경단체에서 5급수로 판정) 액티비티를 한다는 것은 그 만한 수자원 관리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본류대만이 아니라 지천의 관리까지도 병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각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긴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물 부족으로 주암댐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고 있고 제4수원지의 물까지도 가져와야 하는 이런 환경속에 친수공간의 활용이라는 점도 고려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죽산보는 없애고, 승촌보는 상시개방으로 4대강 사업이 가졌던 물길이 차단된 상황을 겨우 수습하는 이 지점에서 액티비티를 위해 물막이 공사를 하고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을 것이라 여깁니다. 국가습지로 지정된 장록습지가 갖는 가치와 의미, 환경적 영향도 충분히 생각했겠지요.

환경적 가치가 활용의 가치와 서로 대척점을 이루지 않고, 관광산업이 지역사회의 일반 시민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민선 8기의 담대한 구상이 실현되었으

면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먼저, 물관리를 하고, 지천과 지류에 대한 연계협력을 통한 수질 및 생태보호를 함께하면서, 그 맑고 푸른 배경에서 이뤄지는 친수공간의 활용 수준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강물은 제 흐르는 방식으로 두어야 합니다. 겨우 복원해가는 생명의 공간이 꿀잼을 위해 다시 가뒀지는 것은 혈맥을 막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언급한 것처럼 조성사업의 최고 의결기관 조성위원회에 있었던 저도 정말 힘겨운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어야 무언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이를 결정하는 문화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가운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약화된 전당의 위상과 조성위원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2년은 그 전 정부에서 수립했던 사업들 하지만 집행하지 못해 찢찢매던 사업을 뒤처리해야 할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는 사이에 전당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독립 체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애초 설계했던 전문인력을 통해 고도화된 문화전당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국가의 재정 지원없이 결코 운영할 수 없다는 논리로 논점이 바뀌었습니다. 문화분야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었다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이로써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는 정부와 중앙관료의 무관심과 냉대 혹은 외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집단 지성의 역할 부재 혹은 각 단체의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다른 이해관계가 그것을 더욱 가속화 했습니다.

세 번째, 정치력의 부재였습니다. 문화부에 의견을 전달할 채널의 부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진심인 의원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네 번째, 광주광역시의 용병술 부재입니다. 광주에서 호명되는 인력들은 전당의 공약 이래 과연 신진 인물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기에 외부의 동조인력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현실입니다. 변화하는 문화환경에 조용하고 전환적인 사고를 통해

광주의 뜻을 전달하고 관철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지요?

다섯 번째, 넘사벽과 같은 전당의 운영 체제입니다. 전당은 그 문을 굳게 닫아 버렸습니다. 민원성 제안이나 하는 광주 문화예술계라고 규정하고 광주의 현장과는 의무방어적인 일 외에는 함께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죽은 언론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언론이 다 그런 것이지 않았지만, 일단은 전당의 광주 언론에 대한 홍보 전략이 주효했는지 모르겠지만, 받아쓰기에 능숙하게 그 세월을 넘어갔고, 시민 누군가 이런 전당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소수 의견으로 치부하거나 어떤 언론사는 출입마저 차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서 자리 하나 꿰차고 있는 현실이 광주입니다.

일곱 번째는 시민의 무관심입니다. 광주에서 전당과 관련한 이슈는 세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병훈의원실, 두 번째, 5·18 관련단체, 세 번째, 문화도시협의회입니다.

이곳에서 발원해서 무언가의 이야기가 나오면 광주시는 그때서야 움직이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전당이 광주시와 공조를 하지 않는다는 방증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민들은 전당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여덟 번째는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 갖는 광주에 대한 부러움과 더불어 솟아나는 반감이었습니다. 문화의 중심을 외치는 순간, 문화수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광주가 가졌던 민주화의 도시나 예향스러움 같은 지역정체성이 가졌던 포용성을 모두 침몰시켜버렸습니다. 그럼 이 말이 함의하는 바를 알리고 공감대라도 형성해야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전당의 이름이건 광주광역시의 이름이건, 시민단체의 이름이건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광주문화도시는 오롯이 광주만의 과업이고, 광주가 해결해야 할 무덤이 된 것입니다. 전당의 건립사업이나 전당의 각종 콘텐츠, 전시, 공연 사업 등에 대해 이를 비평하거나 비판하고 중심을 잡아주길 바라는 문화계의 응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당과 광주광역시는 무엇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그곳은 광주의 심장이고, 광주 공동체의 행동의 장입니다. 전당을 그들만의 리그

의 장으로 두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모욕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실장님의 발제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통합추진 플랫폼” 구축이 언급되었습니다. 예술 분야 뿐만 아니라 광주사회를 망라하여 각각의 역할을 가진 조직들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고 공조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성비의 균형, 지역별 균형, 세대별 균형, 직군별 균형이 이뤄져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평균율을 적용하는 것이 광주의 문화를 새롭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 늘 서봤던 사람,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신망 받는 교수진 등이 좌지우지했던 세월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라고 불리는 광주시민은 늘 언저리를 맴 돌거나 들러리로 이들의 선택과 결정을 지지하는 도구로 살아왔습니다. 문화도시를 정립하기 위한 문화민주주의는 과거의 방식이 가졌던 결함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처음에야 힘이 들겠지만 우리 광주시민은 능히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숙한 역량을 가지고 전당과 지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며 상생발전하는 협의체가 출범해서 전당을 감시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제언과 실천전략을 제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당의 인력들이 광주 사회에 스며들어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초대하고 환대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은 이미 갔습니다. 거론하신 것처럼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거의 전 분야에 고르게 구멍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국립기관화도 되었고, 고용승계도 되었고, 전당재단도 출범했습니다. 아시아문화의 정보소통 창고이자 창·제작 중심활동을 하며 발신지를 자처한 전당은 이러한 ·제작 작품의 유통 플랫폼을 전당재단을 구축했지요. 공적기관이 접근하기 힘든 민간영역의 유통과 시연, 상품화, 문화향유권 증진 등에 전당재단이 전방에 서서 활동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한데 전당재단은 그간 전당을 살려왔던 유일한 기관이자 이 나라 어린이 문화예술 교육의 최고의 공간과 시스템을 가진 어린이 문화원에서 7월말부터 8월말까지 1개월 동안 키자니아라는 직업 체험테마파크를 유치하여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영리기업이나 진행할 법한 그런 이벤트기획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이름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광주광역시나 광주시민이 전당을 바라보는 태도와는 멀어도 너무 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당이 운영할 방책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전진배치 할 새로운 명분이 되겠지요.

문화중심도시 버전 3.0의 시작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엇나간 단추들의 궤적에는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광주광역시가 보다 더 주체적으로 전당과 수평적 관계를 가지며 개입하고 지원하고 공조하는 메커니즘을 가졌어야 합니다. 보강된 인력이 전당에 파견되고, 년차별 실시계획이 문화부를 통과하여 지역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어도 정작 전당활성화와 5개문화권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끌어낼 만한 사업들에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전당의 영역이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문화권 사업에는 한편으로는 전당의 지향이 아시아성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을 담지하고 있는 섹터들이 존재합니다. 농경과 해양과 유목의 아시아적 삶의 터무늬들이 양산한 문화유산을 광주가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아시아성의 한 축을 광주로부터 모아내고, 풀어내고, 공감하며, 확산할 수 있는 소재들이 있음에도 우리안의 시야가 좁았음인지 아니면 그만한 전문가가 없어서인지, 행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못해서인지 서성거리며 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채워있으되 아시아적 삶의 양상은 부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정보원은 어찌 보면 전당을 이끌어왔던 감독들의 개별적 관심사와 전당간의 괴리감에 대한 반증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전부는 아니어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발굴하고 조사하고 담아내도록 앞장서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아울러 현 시기 5대문화권 사업이 정부의 이름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광주시의 이름으로라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2028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본 사업의 운명이 정치적 격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책사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업이 어제까지처럼 지역과 격절되고, 내용도 공유되지 않으며, 민주광장 아래 지하에서만 맴도는 모습을 민선 8기까지 묵도하기에는 광주시민의 양보와 배려와 자금심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는

위해 행위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행정의 조정능력과 실행력이 있는 것이겠지요.

협치를 통해 전당과의 조율을 이끌겠다는 의지는 존중합니다. 당연하지요. 하지만 협치의 테이블에 설 광주시민의 대표성, 성별, 세대별, 정치, 행정, 지역, 계층, 장르 등을 망라한 구성이 바람직하며,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정말 이번에는 그간의 노고가 많았던 분들은 응원의 자리에 있으시고, 새로운 주역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새로운 시장이 된 민선 8기, 새롭게 들어선 정부, 새로운 체제로 변신한 문화전당 등 많은 것들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현장, 관광현장 등은 언제나 묵마름의 연속입니다. 관련 행정과 재원과 시스템이 있음에도 어느 곳에선가 차단되었거나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근본 원인을 저는 관행의 사회, 끼리끼리의 조합, 혁신과 전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28년 광주비엔날레 역사에서도 지역출신의 전시 총감독 한명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도 직무대행이란 체제로 작년까지 왔고, 장르예술의 비평지 하나 없는 예술세계를 지내왔던 것 아닐까요?

진정한 문화도시,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려면 사람을 존중하는 도시가 먼저 되어야 됴를 말씀 드립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가를 존중하고, 예술로 소통하는 문화도시로 가는 여정이 이리도 지난한 길이기에 아마 광주가 그 십자가를 메는 운명을 맞이한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 조직의 개편, 인사이동의 상황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충심을 다해 기조 발제를 해 주신 김준영실장님께 감사드리며, 장문의 지정 토론문을 읽어주신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매일 공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에서 밀려 난 광주 문화 예술

윤 만 식(사.한국민족극협회 상임고문)

시장이 바뀌면 인수위 때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대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요구사항과 시정사항을 제안했는데 이번 8기 인수위에는 생략하였다. 선출된 시장이 관료 출신이 아니고, 젊고, 진취적인 사고로 인식 되어 있어서 어렵히 잘 하시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달이 가까워지지만 실망스러워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한다.

■ 7월 7일 발표한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광주를 담은 첫 번째 보고서 2. 분과별 인수위원 소개에 민선 8기 135개의 정책을 이끌어 낸 20인의 주역들 중 일상 관광, 문화, 예술, 체육 분과 세분 중 관광, 문화, 예술에 호텔 경영학 전공이신 호남대 김모 교수와 문화산업 전공이신 것 같은 설 모씨가, 기초 문화 예술, 융 복합 예술 행위, 미디어 아트 등까지 지역문화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을 제안했는지 의문이다.

■ 밀린 축제, 광주의 현안 5+1에도 문화 예술은 전무하고, 최근 광주광역시가 발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현 문화관광체육실을 문화체육실로 축소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할 계획인 '신 활력 추진본부'에 관광분야를 포함시켜 관광 종합계획 수립 추진, 국내. 외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고 하니 기대를 한번 걸어 봐야겠다.

■ 그동안 문화 예술 관련 시민 사회단체들이 요구했던 광주 비엔날레, 아시아 문화 전당, 광주문화재단 등 10개 가까운 광주문화 예술 관련 기관들의 컨슈럴 타워 역할을 할 문화부시장을 전임 시장이 처음으로 임명하여 그나마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번 문화경제부시장 임명 과정을 보면서 사실상 민선 8기에서의 문화경제부시장 위상과 존재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들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 걱정이 앞선다.

■ 광주 문화예술회관 관장 역시 시민 사회단체들이 요구하여 민간인 전문가를 공모하여 민선 7기에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그나마 민간인이 임명되었으나, 갑자기 2년여 근무 중 돌연 건강상의 문제로 사표를 내고, 시에서 다시 공무원을 임명하였다.

이에 시민사회와 지역의 문화계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 전임 시장께서 약속하신 22년 6월까지 광주 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 공사와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면 개방형 직위로 전환기로 했는데 껌껌 무소식이다. 당시 광주시가 보도자료 배포까지 했던 사항이었지만 합의와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선8기, 문화예술 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

이 당 금(예술이백그라운드 대표)

독한 말로 시작하겠다.

광주는, 정치경제사회오일팔의 도시인가? 문화중심도시인가? 예향의 도시인가?
미래형 광주가 아닌 정체된 광주, 광주의 문화예술은 자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정치경제사회라는 천적을 만나면 자신의 꼬리를 자르는 도마뱀의 잘린 꼬리처럼
약육강식에서 도태된 모습처럼 보인다.

그러한 예로, 현재 중앙정부의 문화도시에 대한 정책 기조가 지역 주도·국가 지원
등으로 변화되어 각 시도, 중소도시에서는 주력적으로 문화도시, 문화마을을 조성
하기에 지역의 정체성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 않은가, 공연예술
의 도시, 문화도시를 내세우는 대구는 오페라전용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다. 장소
또한 삼성그룹 발전의 모태가 된 제일모직 공장터로, 과거 삶의 애환이 담긴 대표
적인 장소를 예술공간 오페라전용극장으로 2003년에 완성했다. 공공 & 민간극장,
미술관, 박물관등 100여개의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명실상부한 공연예술문화도
시로서 위상이 높으니 광주를 문화수도로 지정했을 때 그들의 당혹스러움은 충분
히 이해가 된다.

우리지역 광주는 2002년 문화중심도시 광주임을 선포하고 광주정신의 바탕인 구,
도청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허브를 목표하였으나
20여년이 지난 시점에도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국립아
시아문화전당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문화중심도시에 대한 지역브랜드 콘텐츠를
개발하지 못한 채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양꼬없는 찌뽕같은 문화예술정책을 구
상한다.

7월1일 강기정 광주시장호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광주를 담은 5대 시정목표, 135
개의 실천공약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5대 시정목표는 1.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
제 도시, 2.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3. 따듯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4.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5.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의 비전을 제시하며 5대 목표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적게는 27개에서 42개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5대 목표 어느 곳에 문화예술 관련정책이 들어있을까?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27개안에 3~4개로 슬쩍 얹혀 있더라. 인수위는 현안대책 TF위원들이 30일간 현장점검,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광주발전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했다.

대학 호텔경영학과 교수, GIST 문화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운동건강협회 대표이사로 구성된 관광, 문화, 예술, 체육분과에는 현장예술인, 예술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광주를 표방하는 민선8기 문화예술 정책을 찾아라!

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 예향의 도시이고, 문화중심도시, 문화수도 광주라는 거대한 도시 네이밍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문화예술로 선언했음에도 예술적 가치와 논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문화예술 콘텐츠와 문화예술인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빈약하거나 없다. 선진국의 미래 비전은 문화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어쩌면, 문화예술 정책의 부재는 정치적으로 한마디 던진 복합쇼핑몰 센터로 대신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쇼핑몰에 문화공간도 집어넣고, 예술을 포장한 비즈니스를 근사하게 보여준다면 복합 쇼핑몰 센터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잘 포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관광도시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합쇼핑몰 센터가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논의되고 있는 부지는 전방, 일신방직 공장 부지라는 것이 쟁점이다.

일찍이 전방, 일신방직 부지에 대한 용도사용은 수차례 토론회 등을 통해 문화예술타운이나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서의 부지로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우고 복합쇼핑몰 센터 부지로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정치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것은 광주의 지역적 특색을 브랜드화하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다.

여러모로 빈약한 문화예술정책 방안에 허점을 찔린 것 마냥 맥이 빠진 건 사실이다. 예술가로 살아가기 위해, 예술창작활동을 하기 위해, 예술 생태계를 고민했던 지점의 접점을 정책의 씨줄과 예술가의 날줄로 이어가야 할지 고민스럽다.

제안

1) 광주시립예술단체 전수 조사를 시행해서 순환되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젊은 예술가와 예비예술가의 성장을 돕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선 전문가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시립예술단체의 단원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철밥통 구조에서는 우리 지역 젊은 예술가가 예비예술가를 타 지역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국립극단의 2~3년 단위의 시존제, 기간제 단원제도를 도입해서 새로운 예술가들이 시립예술단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지역의 예술생태계는 건강해지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만들 수 있다.

2) 민간예술가와 예술단체 그리고 민간공연장을 장기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

예술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민간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육성하는 것이다. 예술의 기본은 창작활동이다. 창작활동은 현장경험에서 우선된다. 다양한 특성을 표현하는 예술의 자유로움을 위해 개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연단체와 공간을 조성하여 예술생태계를 활성화 할 수 있다.

민선8기 문화정책 중 보조·지원사업 개선에 대한 토론

정 두 용(청년문화허브 대표)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저는 민선 8기 문화정책 중 ①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중심도시’ -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하고자 합니다.

민선7기 문화정책 중 현장 문화활동가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아래 <정책 4>에 해당했던 ‘보조·지원사업개선’이었습니다. 몇 년간 지지부진 했던 지원 사업 개선이 <붙임 1>과 같이 상당히 큰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정책 4> 문화예술분야 보조·지원사업 개선 추진계획

○ 지원사업 개선 실무 TF 운영

- 운영기간 : '21. 5. ~ 7.(3개월) / 월 2회 회의
- 구 성 : 10인 내외(시 2, 문화재단 3, 민간전문가 자문 5)
- 소요예산 : 3백만원

소관기관	내 용
시	▸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집행지침 및 교부조건 표준안 마련 ▸ 문화예술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문화재단	▸ 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 검토(타 시·도 사례 분석) ▸ 지원사업 중복·불필요한 행정서식 발굴 ▸ 사업별 특성을 반영 정산간소화 방안 마련 등

핵심적인 과제를 몇 개 언급하자면 이렇습니다. <문화예술 보조사업 공모시기 앞당기기>. 그 동안 지원 사업 공모시기가 너무 늦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연말 본예산이 확정되는 12월에 바로 다음 년도 사업 공고를 하도록 앞당긴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12월도 그렇게 빠른 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문

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사업은 10월에 다음연도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진행하고, 2차 공모는 12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 일 년 열 두 달을 활용할 수 있는 긴 호흡의 프로젝트가 가능합니다. 그간 많은 보조금 사업들이 빨라도 3, 4월에 교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사업기간이 4월, 5월에 시작하는 경우가 흔했으며, 심지어 6월 말이 되어서야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 1월에서 4월까지의 민간의 문화 프로그램을 만나기 어려운 문화 공백 기간이었는데, 공모시기가 앞당겨지며 이런 공백기가 다소나마 개선되는 효과를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연예술 사례비 가이드라인 마련> 또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간 공연예술 사례비의 경우 지급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쏟아졌습니다. ‘3천만 원짜리 악기를 들고, 3백만 원짜리 차를 타고, 30만 원짜리 공연을 하러 간다’는 자조 섞인 공연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획자로서 팬스레 미안할 때(?)가 많았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례비 편성 확대>는 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에 한정한다는 점이 무척 아쉽긴 하지만 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발걸음을 떼는 점에서 역시 의미 있습니다.

예술인 개인들에게 가장 와 닿는 변화는 **<문화재단 소액 지원 사업 정산 간소화>** 일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소액사업은 증빙 생략이 가능했고, 인천 같은 경우도 300만 원 이하 지원 사업은 증빙 생략이 가능했지만 광주만큼 그렇지 못했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소액 지원을 받을 때도 정산이 필수이다 보니 그간 정산이 어렵고 번거로워 지원 사업을 포기한다는 예술인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신진 청년 예술가와 원로예술인들에게 그런 경우가 많았을 텐데 의미 있는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2년 단위 문화예술 창·제작 지원 사업 운영>** 역시 현장에서 계속 요구했던 개선사항인데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존 창작지원 사업은 예산을 교부 받고나면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반년에 불과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2년 단위 창·제작 지원 사업이 생겨 훨씬 더 깊이 있는 프로젝트를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시에 제언 및 발표자에 대한 질의>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라면 킬러콘텐츠나 랜드마크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현장의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피부로 와 닿는 변화는 위의 사례처럼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식 제도를 개선해가는 일입니다. 이런 변화가 작년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광주시 민관협치 문화예술분과의 간사를 맡고 있는데 올해 역시 주요 문화예술단체 연대체에서 공통적으로 지원사업 개선에 대한 의견들을 말하며 올해도 작년에 이어 <문화예술분야 보조·지원사업 개선 2.0>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2.0이라기 보다는 TF로 운영하는 차원을 넘어 문화도시정책관실의 중요한 정식 업무로 설정하고 열정 있는 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길 열망합니다. 그리고 작년처럼 의미 있는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잘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내·외부적으로 충분히 칭찬하고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고생해서 일한 담당자가 일할 맛이 나지 않을까요? 이는 특정 개인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하나씩 쌓여가야 선순환의 행정 시스템이 자리 잡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로 시간이 허락한다면 불임 2, 3 관해서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붙임 1 : 광주광역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개선 3대 정책 13대 과제

연번	주요내용	비고
1	· 문화예술 보조사업 “공모시기” 앞당기기 ▶ 연말 본예산 확정시('21.12.) 익년도 통합공모사업 공고	신규
2	· 창·제작 지원사업 결과물 저작권 귀속 명확화 ▶ 보조사업 참여 창작자에게 저작권 귀속, 공익목적 사용시 무상사용	시 보조금 지침 개선
3	· 공연예술분야 사례비 가이드 라인 마련 ▶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과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	문화예술 매뉴얼 개선
4	·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례비 편성확대 ▶ 단체 대표자 사례비 편성비율 상향(10→20%), 예술인(본인) 사례비 허용 ※ 광주 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에 한함	문화재단
5	· 소액 지원사업 정산증빙 간소화 ※ 서울, 부산(대표이사가 정하는 소액사업 증빙생략), 인천(300만원이하 생략)	문화재단
6	· 2년 단위 문화예술 창·제작 지원사업 운영 ▶ 단년도 지원사업의 한계극복, 우수 문화예술콘텐츠 창작 및 개발 지원	신규
7	· 광주특화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지원 ▶ 도시브랜드, 인권 등 광주만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문화예술 창작 지원	신규
8	· 생애 주기별 창작활동 지원 확대 ▶ 원로예술인, 청년예술인, 장애예술인, 신진예술인 창작 지원	신규/확대
9	· 장애 예술인 창·제작 지원강화 ▶ 장애 예술인 창제작 및 전시공간 지원	신규
10	· 문화예술인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문화 메세나 확대 ▶ 청년·신진작가 후원 매칭부담 감소, 기업후원자 적극 발굴	확대
11	· 문화예술 통합홍보 플랫폼 본격운영('21.12.) ▶ 티켓팅 시스템, 일자리 정보, 문화예술 정보교류의 창으로 적극 운영	신규
12	· 예술인 보듬소통센터 운영 강화 ▶ 예술인 복지 현장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 예술인 지위보장 서비스 등	확대
13	· 문화예술인 특화 「예술활동 안심보험」 가입 ▶ 안정적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정망 구축	신규

붙임 2 : 광주시 지원사업 제출서식 중 발췌

서 약 서

당 단체는 「00」 사업 주관단체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 단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공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배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2. 본 제안공모와 관련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모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제안서 작성을 위해 광주광역시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일체에 대하여 절대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 및 저작권은 광주광역시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대 표 사) 업체명 :

대표자 : (인)

(공동 구성원) 업체명 :

대표자 :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붙임 3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평가위원 안내사항

평가위원 유의사항(제5조제1항 관련)

■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점수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 평가대상자에게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평가대상자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 정성 필수 제안 사항 평가 시 업체 제안 내용이 수요기관의 제안 요청 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평가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8기-기대 반, 설렘 반

정 진 삼(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장)

민선8기 문화정책은 “문화시민의 공지와 행복, 품격을 높이는데 가치를 두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실현을 목표”로 하는 큰 비전을 담고 있다.

추상적인 계획 보단 실현가능하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최고의 정책임에는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 전임자의 색깔 지우기에 여념이 없어 민의를 저버린 지속가능한 사업이 통폐합되는 상황을 보게 된다.

기존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필요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문화예술분야 만큼 포괄적이고 다변적인 분야는 없다고 모두 동의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각양각색의 다양하게 표출된 의견을 듣고, 모으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맞이하지만, 훗날 정책방향과 사업의 가치평가가 용두사미가 아니라 사두용미가 오히려 더 낮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란 말처럼 다소 부족한 듯 하지만 근시안적 시각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는 백년대계는 아닐지언정 진취적이고 발전적 요소를 가득 담은 민선 8기의 청사진은 기대해 본다.

1.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중심도시’

문화예술 교육과 생활문화예술 지원이 지역 예술인의 권리 증진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수 있으나 문어발식 균등지원이 아니라 유사 중복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거시안적 안목으로 선택과 필요(욕구)에 따라 집중해야 하며, 유희 공공·민간시설을 아트벙커로 지정하여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자생능력을 키워 나아간다면 미래의 크나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2. 생활 속 문화기반을 다지는 ‘문화적 환경도시’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 확대하고 지역 내 유희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해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확충해 간다면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삶을 살아가면

서 만들어 내는 진정한 생활문화 정착에 광주가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3. 디지털 기술의 가치를 더하는 ‘문화산업도시’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 제작과 사업화 지원이 스펀지 효과 즉, 위에서 물을 뿌리면 아래로 흡수하여 고르게 퍼지는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어야 시가 추구하는 기업하기 좋은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취·창업 지원 및 기업유치까지 문화산업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시민이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끼는 ‘문화 관광도시’

외지인이 관광 목적으로 광주에서 가 볼만한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여기다고 추천할 곳이 딱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광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감만족은 아니어도 보고, 듣고, 느끼고,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예술여행 대표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주가 가진 경쟁력 있는 지역자원을 관광자원화하고 트렌디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함은 물론 도심 곳곳에 문화예술을 통한 핫플레이스(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기 있는 장소)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일에도 게으름이 없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적재적소에 쓰여야할 예산이 불요불급한 곳에 쓰인다면 바로 ‘시민의 혈세낭비’란 지적이 있을 것이다. 광주광역시 민선 8기 초기에 가장 섬세하게 들여다 보아야할 것이 바로 세부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과정이다. 소확행!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작은 것이 아니다. 시민은 작은 행복이 주는 커다란 기쁨을 기대한다.

민선 8기 새로운 문화예술의 부흥을 기대하며

윤 준 혁(주.지니엑스 대표)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문화·예술 분야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해 문화예술활동과 예술교육의 영역에서 벌이를 하던 문화예술교육 강사들도 찾기 어려워졌다. 일상 속 영화관, 공연장 등이 문을 닫은 것은 물론 작은 단위의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던 생활문화시설도 폐쇄되어 박동하던 문화예술의 시간이 한동안 멈췄진 듯했다.

청년문화·예술인 및 청년문화·예술단체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화정책 부서는 청년정책이 청년문화·예술인을 포괄하여 살피주길 원하고, 또 반대로 청년정책 부서는 문화정책의 분야에서 케어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느 한 곳에서도 보살피주지 않는 고립무원 가운데 광주의 청년문화예술인·청년문화단체는 잊혀 갔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해보고자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를 비장하게 준비했다. 같은 해 4월 상상실현네트워크,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예총 등을 공동간사단체로 하고 총 38개의 문화 관련 단체가 연대한 ‘문화공동정책연대’를 결성하여 각 당의 시장 후보자들에게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것을 얼마나 수용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문화행정의 혁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실현’, ‘시민문화권 확대’ 크게 세 가지 주제 아래 10가지의 핵심 정책을 발굴했다. 사실상이 10대 핵심 정책은 그동안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수년간 토론해왔던 정책들로 특히나 ‘각 구별 청년문화의 집 건립’이나 ‘문화예술인 사회혁신 일자리 창출’과 같은 내용들을 담아 연대하여 제언했다.

지난 민선 7기 광주광역시 시장이었던 이용섭 시장 역시 후보 신분으로 ‘문화개방형 공직자 확대 및 문화기관 이사회 구성 개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보장조례 제정’ 등의 두 개 항목의 유보를 제외하고 모두 동의한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당선 이후에도 인수위를 통해 몇 번의 만남을 가졌었고 무사히 정책에 반영되는 듯 보였다.

문화 경제부시장의 역할

민선 7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한 대응을 위해 문화부시장의 필요를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문화경제부시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었지만 인사 이후의 행보는 무늬만 ‘문화부시장’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또한 ‘문화경제부시장’이라는 직책이 문화행정의 실행과 중앙정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관계가 아닌 문화·예술 분야의 구성원의 적극적인 소통 활성화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민사회에서 요청한 것임을 망각한 듯했다. 이번 민선 8기는 민선 7기 인사의 아쉬움을 반영했어야 하지만 다시 한번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한 시정의 첫 번째 인사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시민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듯하다

지역문화 생태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고민

광주시는 그간 ‘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노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인프라와 콘텐츠를 확충해왔다. 하지만 문화생태 안에는 향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 운동가, 행정가, 활동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나 문화예술의 안정적인 창·제작 환경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가 아닌 순수문화예술 기반의 예술산업 기반의 종사자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미 광주는 지역문화콘텐츠 및 예술공연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은지 오래이기 때문에 아티스트 스스로가 경제활동을 위해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거나 생활의 연장을 위해 창업 분야의 지원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광주 지역 내에 명확한 ‘마켓’을 구축하지 않고, 향유자를 위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은 가격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 창작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또한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 구축 이후에 대한 예컨대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브랜드와 함께 각종 미디어 아트 및 디지털 아트와 관련한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나 일부 작가들이 아닌 신직작가 및 청년작가에게 열려있는지 의문이다. 작가의 기획과 의도가 연출이 되는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만큼 한번 만들어지면 특정 작가의 전유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모든 창작자에게 기회가 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관련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시도도 필요하다.

문화정책은 한정된 예산을 잘 분배하여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적 생태를 위해 쓰여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문화정책의 쓰임과 관련한 지자체의 담당자, 전문가, 현장의 예술인과 시민이 만나면 매번 문화정책에 대한 이론과 현장의 실재가 다름을 서로 간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사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를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소통’과 ‘협치’의 기회를 늘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소라의 환경이 다른 탓인지 소통의 의지는 있으나 소통이 원활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 때문에 협치의 과정까지 가는 데는 더욱 어려웠다. 그동안의 시정의 시작은 언제나 걱정과 우려가 컸지만. 광주는 이제 내공이 있다. 얼마 전 꾸려진 아문도시 민관정 협의체¹⁾ 역시 이런 고민 끝에 만들어진 ‘소통’과 ‘협치’의 결실이다. 앞으로 여러 정책과 다양한 분야에서 이와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열리길 기대한다.

1)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사업 정착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 생태계를 꿈꾸며

김 소 진(1995Hz 대표)

지난 2월 광주 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예술 노동자 장도국 배우를 중심으로 광주의 뜻있는 예술인들이 모여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바라는 예술인 모임 (이하 안전 공정 예술인 모임)’을 창립했다. 우리들의 첫 번째 활동은 예술인들의 지속이 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함께 만들고자 20대 대선 후보 정당 관계자들과(국민의 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각 장르의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우리는 지역 예술인들의 열린 소통을 위해 안전 공정 예술인 모임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향후 안전 공정 예술인모임의 활동 보고를 지속해서 공유하고 있다. 이후 3월에는 광주 예술인들과 함께 지역 정당 방문 원정대를 구성하여 간담회에 함께 해준 정당 관계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지방선거 이후 문화예술 공약 이행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게끔 문화예술 정책 협약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안전 공정 예술인 모임은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각 정당에서 공유한 문화예술 정책들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제시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4월에는 ‘광주 문화예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난 2월에 진행됐던 ‘20대 대선 후보 정당 초청 문화예술 정책 간담회’에서 각 정당이 제시해준 문화예술 정책과 광주 예술계 현안에 대한 약속이 두 달 동안 어떻게 이행되어왔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이때 우리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열린 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안전 공정 예술인 모임은 5·18 민중항쟁 기념 전야제에 ‘광주 예술인 권익 지원센터’ 오월 시민 난장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우리는 지역예술인들을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관한 강연과 무료 세무/법률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길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광주 문화예술계 주요 의제가 담긴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정책협약 동의서에 연대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안전 공정 예술인 모임은 다섯 개 정당의 광주시장 후보들을 찾아가 안전하고 공정한 광주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 정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시장 후보자들의 약속을 받아내고자 문화예술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였다.²⁾ 이후 안전 공정 예술인 모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협약식의 과정이 담긴 <광주광역시 시장 후보와 함께하는 광주 문화예술 정책 묻고, 답하고, 약속한다.> 영상 다섯 편을 제작하여 업로드하기도 했다.³⁾ 안전 공정 예술인 모임의 장도국 배우는 “선거 이후 당선된 시장과 정당이 언급한 문화예술 공약이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매월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 예술인을 비롯한 지역 예술인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현장 경험과 이들이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매번 다짐한다.⁴⁾ 그러나 아직도 광주의 문화예술 발전 및 진흥에 대한 기본 인식과 실행 의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는 미비하다.

문화예술 현장에서 외치는 광주 예술인들의 목소리는 이미 충분하다. 안전 공정 예술인 모임은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조례와 같은 문화예술 주요 법률과 관련된 기본조례 제정 현황 및 책무 이행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는 실증적인 문화예술 정책연구와 광주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광주 고유의 독자적인 문화예술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

2)이 삼 섭, 「광 주 시 장 후 보 들, 문 화 예 술 활 성 화 정 책 협 약」

<http://www.mdilbo.com/detail/0kIA7d/670758> (2022.07.21. 최종 방문)

3) 안전공정 예술인모임 <https://www.youtube.com/channel/UCqgno6JJMAekhR9qT0L8sXQ>

4) ‘민선8기,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발표문 1쪽 참고

<광주 문화예술계 주요 의제>

첫째, 재난시대 문화예술인의 생존권·창작권 보장

- 코로나19 손실보상, 광주형 예술인 창작(기본)수당 지급
- 시 산하 문화/예술/마을 유희공간 개방,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 지원주택/예술인 마을 확대
- 위기(재난) 대응 매뉴얼 구축, 안전사고 예방 교육/처벌 규정 강화
- 민간 문화시설 방역설비 개선 및 지원 확대

둘째,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 문화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현재 진행중)
- 독립적인 예술인 ‘권익지원센터’ 설립
- 서면계약 체결 불이행 패널티 강화(공공예산을 사용하는 각종 행사/공연)
- 예술 고등학교 및 대학 예비 예술인의 현장 경험 기회 확대

셋째,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문화메세나/펀드 조성 사업 확대
- 문화거리, 문화마을 조성
- 학교문화예술 교육/시민문화예술 교육 의무화
-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넷째, 장애 예술인 지원 정책 확대

- 장애예술인 지원센터
- 이동지원 차량 확대
- 장애예술인 교육환경 조성(장애학생 지원센터 설립)
- 장애/비장애 예술인 협업 지원사업 확대
- 배리어프리 극장, 창작 환경 조성 예산 마련

광주문화도시협의회는

시민의 문화권 확대와 문화민주주의 실현, 시민이 주체가 되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7년 창립된 협의체 단체입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비매품>

2022년 1차 생통포럼(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포럼) 자료집

지은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펴낸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박병주

펴낸일 · 2022. 07. 25.

인 쇄 ·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22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